

## 大學教授의 意識構造

李 根 洙

(京畿大 史學科)

## 1. 머리말

1980 년대를 마감하는 이 시기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 있어서 실로 격변의 역사 현상이다. 1980 년 5 월 민족의 아픔을 겪은 이래 수년간의 격변기를 삶으로 하여 오면서 우리 국민은 이른바 제 5 공화국의 착박한 토양 아래에서도 社會民主化를 실현하고 民族의 自主的인 統一을 쟁취하기 위하여 온 역량을 집결시켜 왔다.

특히 1987 년 6 월의 감동적인 민중 항쟁을 통해 이전까지 분절적이고 단속적인 그리고 취약한 운동 주체 역량이 극복되면서,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은 이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이 함께 하는 변혁 운동으로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편 1987 년 6 월 민중 항쟁의 감동과 12 월 대통령 선거 이후의 참담한 반전 과정들이 날카롭게 대비되면서 이후의 民族·民主運動은 상당한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제 6 공화국의 주도층은 6·29 선언 이후 국민에게 약속했던 光州민주화운동 문제의 해결과 5공 비리 청산 및 반민주 악법 폐쇄 등의 각종 민주화 조치들을 유보하고 중간평가들 아예 폐지하여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을 위배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화운동과 민족통일운동은 실로 광범한 양적 확산과 질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증대된 민중 역량을 변

혁적 민족민주운동의 길로 확고하게 안내할 수 있는 통일된 방향과 정책의 부재 및 실천 방안들의 오류에서 오는 제반 한계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같은 민족민주운동의 문제는 1987 년 이후 때로는 학술운동 단체의 일원으로서 또는 전국 단위의 교수협의회를 조직하여 그 한 몫을 수행하여 온 우리 사회의 진보적 지식인인 대학 교수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현대사에서의 大學教授의 意識構造의 변천 과정과 그 시대적 한계를 점검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혁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더욱 진전된 형태로 그 한 몫을 실천해 나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같은 문제 의식 속에서 1945 년 이후의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를 그 時代的 制約과 함께 反省的으로 檢討하고자 한다. 물론 이 글에서는 각 시대의 역사 발전 방향과 상충되거나 심하게 괴리되는 대학 교수의 인식 내용은 그 대상으로 제외한다. 이를테면 해방 정국에서의 민족 분단을 적극적으로 주창한 것, 1954 년 11 월 '사사오입 개헌'에서 이론적인 뒷받침을 한 어용 교수의 문제, 박정희 정권하에서의 체제 참여 교수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또한 1980 년 전두환 정권의 출발을 합리화 했던 '국난은 장군을 불렀다' 라는 류의 대학 교수의 논문 그리고

같은 무렵에 나타난 ‘단군 이래의 우리 역사를 모두 다섯 개의 조국으로 구분하고 제5조국=제5공화국이라고 주장하여 제5공화국의 시작을 우리 역사의 벽찬 여명이라고 감격해 마지않는’ 류의 논문도 제외했다. 그리고 최근 보혁 대결 구도에서 기득권을 향유한 세력의 입장을 대변했던 ‘이 땅에 우익은 죽었는가?’ 류의 대학 교수의 인식 내용도 제외하였음은 물론이다.

## 2. 解放政局과 '50年代 大學教授의 意識構造

### 1) 解放政局

1945년 8월 15일 한국을 강제 점령했던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여 마침내 2차 세계 대전은 종식되었고 식민지 조선은 감격스런 ‘해방조선’을 맞게 되었다. 바야흐로 이 땅에 새로운 역사의 장이 펼쳐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해방이 곧바로 모든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과제를 우리 민족에게 던져주고 그 해결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첫째 과제는 민족의 자주 독립이었다. 안으로는 일제 식민지 지배에 동조·협력한 부일 매판 세력을 척결하고, 밖으로는 일본은 물론 해방된 조국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외세에 대해서 철저히 자주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었다. 둘째 과제는 일제의 강제 점령에서의 半봉건적 사회 체제를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었으며, 위의 두 가지 과제의 실현을 토대로 하여 민족해방운동의 주도 세력인 민중을 주체로 하는 새로운 민족 국가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의 실현은 해방이 지니는 역사적 한계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것으로 되고 말았다. 해방이 식민지 민중의 민족 해방 전쟁에 의해 쟁취된 것이 아니고 미국과 소련을 양측으로 하는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에서 ‘주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두 외세의 개입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이에 따라 우리 민족의 자주적 결정은 크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민족 내적으로는 항일 운동 세력이 이념적·지역적으로 분산되어 하나의 통일된 정치 세력으

로 결집되지 못함으로써 해방 정국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힘들었다. 이와 같은 해방 조국의 한계는 당시의 지식인인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해방 직후에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지식인들은 각종 학술 단체를 창설하거나 식민지 시대의 것을 재건하여 해방 조국의 당면의 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체제를 갖추게 된다. 즉 ‘조선어학회’, ‘조선민속학회’, ‘진단학회’ 등을 재건하고 ‘조선산악회’, ‘조선어연구회’, ‘조선학술원’, ‘민족문화연구소’, ‘에스페란토조선학회’ 등을 창설한 당시의 지식인들의 의식 구조를 ‘조선학술원’의 강령을 통해 살필 수 있다. ‘조선학술원’은 후의 좌·우익계 인사가 망라된 학술단체로서 해방 직후인 1945년 9월에 창설되는데 다음과 같은 강령을 채택하고 있다.

“과학의 제부문에 걸쳐서 진리를 탐구하며 나아가서 국가의 요청에 대한 학술 동원의 중추가 되기를 목적으로 한다. 국가 조직이 완성되고 국책이 확립될 때까지 조선 학술계의 총력을 집결하여 해방 건설의 위업에 협력할 것을 당면의 임무로 한다.”

또한 당시 대학에서 역사 교수로 재직하던 손진태, 이인영과 역사학자 안재홍 등 소위 ‘신민족주의’ 사학자는 해방 직후의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여 자주적 민족 국가의 수립과 민족적 자유와 평등의 확보라는 시각에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재평가하고,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여 나름대로 민족사의 과제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 이리하여 당시의 지식인들은 남·북에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분단이 고착화되기 이전까지는 해방 조국의 현실에 당면하여 무엇보다도 좌·우익에 대한 극한 대립은 의식적으로 자제하거나 억제하고 민족 화합에 역점을 두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파시즘화 할 요소와 대결하는 것이 당시의 과제라고 인식하였다. 또한 미군정에 대하여도 미·소의 외세 배경과 민족적 주체성에 입각한 조선의 건국이 없이는 한반도에 위기가 올 것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당시 지식인들은 공위의 결렬, 유엔의 관여, 단정 수립에 이르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가 민족의 에원을 외면한 채 분단 고착의 방향

으로 흘러갈 때 민족적 양심과 울분에 호소하여 分斷을 克服하고 統一을 이루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인다. 즉 당시의 지식인들은 민족 주체성과 독립, 민주주의 그리고 민족 통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이를 해방 조국에 실현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대학 교수 등 지식인들의 이와 같은 해방 정국에 대응한 학문의 사회적 실천성 모색의 노력들은 앞에서 말한 해방 조국이 당면한 한계로 인하여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미군정에 의해 추진된 소위 '국립서울대학안, 약칭 국대안' 정책에서 볼 수 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국대안은 미군정 장관 아놀드의 휘하에서 육군 포병 대위 라카드가 책임을 맡고 유억겸과 오천석이 학무국 국장과 차장으로서 주도하고, 한민당을 비롯한 민족청년단, 홍사단에 속한 인사들을 주축으로 하여 '한국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실무 작업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46년 7월 3일 발표한 국대안은 그 내용과 미군정에 의해 배타적으로 선발된 교육 정책 주도 세력의 성향으로 보아 미군정기 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이 당시 대학내의 학생 및 교수의 이념적 진보성을 견제하고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의 확대 강화에 역점을 둔 것이다. 더구나 국대안 반대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교수의 집단 사표를 초대 총장인 앤스테드 대위가 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복직시킬 때 선별적으로 채용하였으니, 국대안이 실시된 직후의 국립대학 교수는 429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311 명이 국대안을 반대하면서 사임하였고 곧이어 191 명의 교수가 새로이 채용되어 309 명이 되었다가, 그 가운데 205 명이 사임하여 남은 교수는 100 여 명에 불과하였다. 결국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 속에서 많은 진보적인 교수들이 대학에서 쫓겨나고 학계를 떠나게 되어, 미군정에 의한 우리나라 대학 교수진의 재편이 이루어진 셈이다.

국대안 반대 파들은 '47년 10월 탈락된 학생들 다수가 복직되고 앤스테드 총장 대신 한국인 총장이 선임됨으로써 표면적으로는 일단락 되나, 그때 가지적으로 이루어진 대학에서의 이념적 진보 성향의 제거는 정부 수립 후의 학원에 대한

사상 통제 정책으로 이어지게 된다. 즉 '48년 이후에는 대학에서의 사상의 자유를 표방하면서 자행되었던 학원 내에서의 좌익적 언동은 일절 용납되지 않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당시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의 '일민주의'론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는 일민주의란 인간주의와 민주주의로 이루어진 민족주의라고 주장하고, 이 일민주의 사상의 보급을 문교 정책 최대의 과제로 삼으면서 학원의 사상적 안정과 국민 사상의 귀일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이러한 입장에서 또 중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에 학도호국단을 조직하도록 하였다. '49년 4월에 결성된 학도호국단은 강력한 종적 조직을 통하여 학원의 사상적 획일화와 좌익 활동의 제어를 기도한 것이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해방 정국을 맞이하여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한 지식인들은 학술 단체의 조직과 언론 활동을 통해 나름대로 해방 조국의 역사적 현실에서 주어지는 민족사의 과제의 실천을 모색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그에 일관된 의식 구조는 民族 主體性과 自主 獨立, 民主主義의 실현 그리고 民族統一의 노선이었다. 그러나 국대안 정책에서 보이듯이 미군정하에서의 이념적 진보성을 지닌 교수의 대학과 학계로부터의 축출과 미국식 민주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 노선의 강화 그리고 단독 정부 수립 후의 학원에 가해진 사상의 통제 등 분단 체제하의 교육 풍토가 강화된다. 이러한 해방 조국이 당면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해방 이후 단정 수립으로 분단 체제가 현실화 할 즈음의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는 민족적 허무주의, 권력지향적 풍조, 어용, 현실 순응주의 기풍이 만연하는 지적 풍조에 함몰되어 가고 있었다.

## 2) '50年代

미군정기에 극우적·매카시즘적 자유 민주주의와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교육 정책의 추구는 냉전 체제하의 분단 구조가 심화되는 '50년대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이른바 제1공화국 때는 심하게 경직된 교육 풍토와 사회 풍토를 조성하였고, 이러한 상황은 '50년대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를 크게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더구나 국토의 파괴와 동시에 학문과 지식의 파괴를 의미한 1950년의 한국 전쟁 이후 분단 체제는 더욱 고착화되고 반공 이데올로기는 더욱 원색적으로 경직화되어 민족과 정치의 분단만이 아니라 사상의 분단, 지식의 분단, 지식인의 분단 시대를 맞게 된다.

'50년 6·25 한국 전쟁은 막대한 인적·물적 손실과 함께 커다란 민족적 시련을 안겨 주었으며, 그것은 출범 후 불과 수년여의 대학교육에도 커다란 피해를 초래하였음은 물론이다. 전쟁 이후 모든 교육이 중단되고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문교부는 '51년 5월 4일 '대학교육에 관한 전시 특별조치령'을 공포하여 전시 연합 대학을 부산·광주·전주·대전에 설치하였으니 '52년 5월 31일자로 전시 연합 대학을 해체할 때까지 이 4개 대학에 수용된 학생 수는 6,455명에 달하였고 동원된 교수는 444명이었다. 전란으로 인하여 교수 사회는 큰 상처를 입게 되는데, 특히 전쟁중에 미처 피난을 못하여 서울에 남아 있던 교수 중에 역사학자인 손진태, 이인영 교수를 비롯한 다수의 중견 학자들의 남북이 그것이다.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복 후 문교부와 각 대학의 도강과 교수들에 의하여 전쟁중 서울에 남겨 되었던 소위 잔류교수에 대한 심사 조치이었다. 남하하지 못한 교수 모두가 심사 대상에 올랐으며 자술서와 투서 등을 참고하여 진행된 심사는 이미 해방 후 미군정과 단정 수립 직후 반공의 국시하에 강력한 사상 통제가 이루어진 후에 다시 강화된 전란 속에서의 사상 정화 조치인 것이다. 이러한 사상 통제 조치는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를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후 '50년대에는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져 대학 교수의 의식을 경직화시키고 위축시켰던 것이다.

'50년대에 자유당 정권은 독재 체제를 더욱 강화하고 '58년 12월에는 이후 역대 정권이 정권 유지를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소위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였으며, 특히 대학의 비판을 꺼려 학원 사찰을 강화하고 교수들에게는 자유당 독재 체제를 지지하도록 여러 가지 압력이 가해졌다. 그리하

여 '50년대 후반기로 가면서 학문과 사상의 자유, 대학의 자치 영역은 크게 축소·위축되어 갔던 것이다. 이처럼 경직된 지적 풍토에서도 대학 교수들은 학문이 정치의 시녀로 전락하는 현실을 개탄하고 학문의 권위와 대학의 자유를 역설한다. 또한 '56년 5·15 선거를 자유당 정권과 국민의 싸움으로 해석하고 그 결과는 민주국민의 압도적 승리였다고 평가하기도 하였다(대학신문, '56, 5.28일자 참조). 그리고 대학 교수들은 「사상계」 등 진보적 잡지와 신문을 통하여 민주주의의 이념을 기준으로 하여 반이승만·반독재 운동을 전개하여 나간다. 즉 '5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반독재 운동이 전개되고 또한 미국에 예속된 정치·사회·문화 등에 대한 자각도 싹트게 되어 이러한 과정에서 지적 풍토가 변화하게 된다.

그러나 '50년대 후반기의 대학 교수들의 반이승만·반독재 운동은 그것이 개인적인 활동에 의한 분절적이고 단속적인 운동에 그치고 말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으로 승화되고 발전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비판적인 인식 내용이 이승만 정권의 형식적 자유주의에 대한 반독재 민주주의 운동에 한정되어서 '50년대의 분단 구조와 냉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민족적이거나 민중적인 자각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있다.

### 3. 1960~'70年代 大學教授의 意識構造

#### 1) '60年代

'60년대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는 1960년의 4월 혁명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널리 알려진 대로 4월 혁명은 미시적으로 보면 1960년 3월 15일의 부정 선거에 대응해서 일어난 革命이었다. 3·15 선거가 이승만 정권의 폭력적 선거 조작에 의해 좌절되었을 때 그에 대한 불만 또한 단순한 선거 부정에 대한 비난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한국 사회의 민중 부문 중 유일하게 집단화 될 수 있었던 학생 세력이 한국 사회의 모순 구조를 남보다 먼저 의식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의식이 토대가 되어 이승만 정권의 부정 선거를 계

기로 민중의 분노를 촉발시킬 수 있었다. 2월 28일 대구 지방의 고등학교에서부터 터져 나오기 시작한 학생들의 가두 시위는 곧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점차로 민중의 합세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의 시위를 기점으로 하여 이튿날인 19일에는 서울대 문리대생을 필두로 시내 각 대학과 고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시민 다수가 가두 시위를 전개했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시위 군중에 대하여 서슴없이 총기를 발사하여 유혈 진압을 하는 한편 군대의 힘을 빌어 집권 연장을 꾀하는 방편으로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으로 하여금 시위를 진압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는 계엄령하에서도 전국에서 끊이지 않고 전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 교수단의 데모가 뒤따르게 되니 이것은 위에서 말한 대로 분절적이고 단속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운동에 그쳤던 '50년대의 대학 교수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것이었다. 19일의 유혈 사태에 충격을 받은 대학 교수들은 각 대학별로 이승만 정권에 항의하는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었으니, 4월 22일 서울대 문리대 교수들과 연세대 교수들이 구속 학생의 석방과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서울 시내 각 대학의 교수들이 횡적으로 연대하여 25일 오후 3시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전체 교수 회의를 300여 명의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고 모두 15개 항의 시국선언문을 채택한 뒤 '학생의 피에 보답하라'는 현수막을 들고 대학로—을지로—국회의사당 앞까지 가두 데모를 한 것이 그것이다. 25일 대학 교수단의 데모를 고비로 하여 이승만은 26일 하야 성명을 발표하고 12년 이승만 독재 정권의 막을 내렸다. 4월 혁명은 이후 더 진전되어 도시와 농촌의 기층 민중과 교원 등 진보적 지식인이 함께 하는 민중 운동으로 승화되면서 민족주의가 각성되어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 운동으로 발전하게 된다. 즉 4월 혁명은 그것이 단순히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학생 혁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단에 의해 단절된 민족민주운동의 흐름을 다시 복원시키고 이후에 증폭하게

되는 우리 현대사의 변혁 운동의 일환인 것이다.

이때 시국선언문에서 보여진 '60년대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는 대체로 이승만 政權의 失政과 獨裁 體制를 批判하면서 自由民主主義의 이념을 강하게 指向하고 있다. 이 시기의 운동이 비록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이 形式的 民主主義의 고양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일정한 限界를 보이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와 통일, 민족 자주 및 자립 경제가 제기되어야 할 상황에서 형식적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분단 상황에 대한 역사 의식이 전혀 표출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 시기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또한 몇몇 대학에서는 4월 혁명 이후 사회 내에서의 대학의 권위가 높아지자 대체로 교수들의 친목 도모와 권익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수협의회를 조직하여 교수 단체의 연대와 조직력을 갖추어 나갔다. 그러나 이러한 교수단의 연대와 조직의 활성화 기운은 곧이은 5·16 군부 쿠데타로 무산되고 말았다.

5·16 이후 전개되는 '60년대의 대학은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대학 정책으로 말미암아 대학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게 되고, 따라서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도 대학의 자유에 대한 자율적 규재론이 나오는가 하면 대학의 자유는 지식과 교양을 갖춘 자유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체제 순응적인 나약한 모습을 띠게 된다. 그후 '64년의 對日 굴욕 외교에 대한 민족적 저항과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투쟁인 6·3 운동이 전개되면서 고양된 反獨裁 意識과 反帝反日 民族 意識은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와 맥락을 함께 하면서 발전된다. 즉 1965년에는 6·3 운동을 배후에서 선동했다는 혐의로 일부 교수가 징계를 받았으며, 이 운동과 관련이 깊은 단체인 서울대 문리과 대학에서 결성된 민족주의비교연구회와 관련되었다 하여 일부 교수가 문교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당시의 현실에 대응한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의 일면을 드러내 준다.

'60년대 대학 교수의 현실 상황에 대한 적극적 인식은 이처럼 6·3 운동을 계기로 고양된 반

독재 의식과 반재 민족 의식의 형태로 나타나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가 가시적으로 강화된 1969년 3선 개헌 시기에 그에 반대 서명을 했다는 이유로 몇몇 교수가 '정치 교수'로 몰려서 강단에서 쫓겨나 수난을 당하게 되니, 변화된 사회 상황에 대한 대학 교수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참여가 1969년 이후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 시기 대학 교수의 현실 참여와 관련해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는 이전에는 그같은 운동이 부분적·개인적으로 그리고 일회적으로 이루어지는 형태이었으나, 3선 개헌 반대 서명 이후에는 대학 교수뿐 아니라 언론인, 종교인, 변호사, 문인 등 각 부문의 지식인과의 연대 운동이 나타나게 되며, 따라서 그 역량도 한층 강화되게 된다.

## 2) '70年代

1970년대에 들어와 박정희 정권의 독재 체제는 더욱 강화되고 이에 상응하여 '70년 12월에는 교련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되어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1971년 8월에는 서울대의 교수들은 대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의 보장 등을 요구하는 '학원자주화선언'을 하여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를 비판하고 大學自主化 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1972년 유신 체제와 1974년의 긴급 조치에 대응하여 사회 각층의 지식인들의 反獨裁 운동 또한 활발하게 전개되어 나갔으니, 1971년의 '민주수호국민협의회'와 '73년말의 '유신헌법개헌서명운동', '74년 11월의 수 명의 대학 교수를 포함한 각계 인사 71명이 서명한 '민주회복국민선언대회'의 개최 등이 그것이며, 이 운동에는 대학 교수를 포함한 각 분야의 지식인들이 연대하여 참여하였다. 특히 '75년 5월 13일 박정권은 체제 유지를 위한 마지막 수단인 긴급 조치 9호를 선포하게 되니, 긴급 조치 9호 선포 직후 박정권이 내린 일련의 조치들은 우선 대학에 집중되었다. 문교부는 각 대학에 학생 썩을 해산령을 내리고, 5월 20일에는 전국 고교 및 대학에 학도호국단을 결성하고 대학에서의 군사 교육 체제를 강화하였다. 그와 함께 '국가 안보를

위하여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10여 명의 이른바 문제 교수들에게 해임을 권고하여 사직케 하니, 이후부터 소위 해직 교수가 양산되게 된다. 7월 9일에는 이른바 4대 전 시 입법인 '사회안전법', '방위세법', '민방위기본법', '교육관계법개정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된다. 개정된 교육 관계법은 교수 제임용제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문제 교수'를 대학에서 축출하고 교수들의 어용화를 촉진시키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1970년대 후반기의 현실 사회에 대한 대학 교수의 의식 표출은 대학에 가해지는 경원 안보 차원의 물리력이 강력한 상태에서 위축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기독교교회협의회, 민주회복국민회의 등 지식인 조직 운동이 학생 운동, 민중 운동과 연계하여 反維新·反獨裁 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바탕으로 하여 유신 체제에서 박해를 받은 해직 교수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의 현실 인식이 드러나게 된다. 해직 교수들은 1977년 12월 2일 박정권의 안보주의 정책과 고도 경제성장 정책이 각각 자유의 유보와 정의의 봉쇄라는 비극을 빚어내고 있다고 비판하고,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을 촉구하는 '민주교육선언'을 발표한다. 이어 '78년 3월 24일 '해직교수협의회'를 발족시키고 동료 교수들에게 '모든 교수는 진실을 말하고 가르치며 진정한 民主·民族教育을 실현하고 학생 처벌에 저항할 것'을 요구하는 '동료 교수들에게 보내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들의 의식은 처음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한 반독재 민주화운동이 그 중심 내용이었는데 점차로 진전되어 유신 말기인 1979년 8월에 발표한 '다시 새 학기를 맞으면서'에는 '땀 흘려 일하며 생활하는 민중의 아픔에 힘껏 동참할 것을 다짐하고, 민족의 지상 과제는 통일이요 이 나라의 국시는 민주주의임을 명시하고 自主·平和·民主統一을 저해하는 국내·외의 모든 세력과 투쟁한다'라고 하여 민족 의식, 민주 의식, 민중 의식을 바탕으로 한 현실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후 문제 교수로서 해직된 '해직 교수'는 1979년에는 26명에 달하였으며, 그때까지 독자적으로 혹은 자유실천문인협의회, 기독교

수협회의 등과 연계하여 민주교육·민족교육의 실현과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매진하였다.

물론 이들 해직 교수의 의식이 당시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를 대표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 교수는 유신 체제의 경직된 독재 체제 아래에서 그리고 너무나 명백한 민족·민주의 모순 구조하에서 그의 극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시기의 반독재 민주화의 실천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실현하는 교수 집단으로는 해직 교수의 활동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은 다른 대학 교수들에게도 점차 영향을 끼쳤으니, 1978년 6월에는 전남대 교수 11명이 학원에 대한 외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민족의 숙원인 자주·평화통일을 위한 민족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할 것을 다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선언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 4. '80年代 大學教授의 意識構造

군사 쿠데타—3선 개헌—비상 사태 선언—유신 체제로 이어오던 박정희 정권은 1974년 이래 긴급 조치 1호~9호를 통해 아홉번이나 대통령의 무한 권력을 행사하여 박정희의 영구 집권을 꾀하였다. 그러나 전술한 대로 '70년대에 고양된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유신 철폐를 향한 민중운동의 토양이 되었다. 그리하여 '78년 12월 12일 국회의원 선거는 야당인 신민당이 여당인 공화당을 총 득표율에서 1.1% 앞서게 되어 민심이 박정희로부터 이반되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리하여 표면화된 유신 체제의 한계는 '79년 8월 이른바 'YH 사건' 그리고 釜馬사태 등으로 극대화되어 그 종말을 재촉하다가 급기야는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측근인 중앙정보부장에 의하여 암살됨으로써 유신 체제는 붕괴되었다. 비록 그 붕괴 방식은 유신 체제를 지탱했던 세력간의 내부 갈등의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물론 이것은 '70년대에 줄기차게 이루어진 반독재 민주화운동의 귀결인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운동 세력은 10·26 이후의 상황을 주체적인 민주화운동의 실천 과정으로 삼아 사회 제반의 민주화운동을 급속히 확대하였다. 이제 이 운

동의 목표는 유신 체제의 척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정한 民主化의 실현과 民族의 自主의인 統一을 구현하는 데 있는 것이다. '80년대의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도 이러한 '80년대의 민족·민주운동과 맥락을 함께 하면서 형성되었다.

10·26 이후 긴급 조치가 해제되고 유신 체제의 암울한 비민주적 상황이 사라지고 이른바 '민주화의 봄'으로 표현되는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회민주화운동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던 대학가에도 당연히 민주화의 과정이 실현되었다. 그리하여 전국 각 대학에서는 민주학생회의 부활, 대학의 자율성 보장, 교수협회의 발족, 교권의 확립 등 민주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10·26 이후 재기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군부는 12·12를 거쳐 光州 민중항쟁을 유혈 진압하고 정권을 장악하여 이른바 제5공화국이 시작된다. 제5공화국 초기의 대학가는 다시 유신시대로 퇴기하는 반동적인 모습을 보이니, 모든 대학민주화의 실천 내용은 '80년 5·17 이후 일체가 유보된 채 무산되고 만다. '80년 2월말에는 해직 교수 전원이 무조건 복직되었으나, 5·17 이후 7월말에는 다시 무려 86명의 교수들이 또다시 해직되게 된다. 그리고 7·30 교육 개혁 조치로 수업 관리 요령, 출결 조항 심지어는 레포트 부과 요령까지 학사 관리 지침으로 시달될 정도로 대학의 독자성·자율성은 철저히 훼손된다.

'80년대 대학 교수를 위요한 현실 상황은 이 같이 암울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이후 '83년 12월 구속 학생 석방과 해직 교수의 복직, 대학 사찰 기관원의 철수 등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산물인 일련의 대학 자율화 조치를 계기로 하여 대학의 실질적인 자율화 운동이 사회민주화 운동과 상응하여 전개된다. 그리하여 '80년대 후반기에 진정한 大學民主化는 社會民主化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대학 교수의 사회민주화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니, 그의 구체적인 형태가 1986년 4월에 전국 각 대학의 교수들에 의해 대학별로 행해진 시국선언문의 발표이다. 이후에 대학 교수의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민주화의 참여는 조

적력을 갖추고 사회의 여러 민주 단체와 회적으로 연계하여 이루어지니 대체로 다음의 두 형태로 전개된다.

하나는 각 대학 단위의 교수협의회 발족이다. 물론 교수협의회는 1960년 4월 혁명 직후에도 결성을 시도하였고, 1980년초 '민주화의 봄' 시기에도 시도된 바 있다. 그러나 그것들이 각각 5·16 군부 쿠데타와 5·17 광주 민중항쟁 사태로 무산되다가, 1980년대 후반기에는 각 대학별로 결성을 시작하여 전국의 대학에서 거의 결성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체로 대학 자율화를 실현하는 주체가 대학 구성원인 교수와 학생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교수에 의한 총·학장의 선출과 교수협의회 의결 기구화이다.

다른 하나는 전국적인 교수 조직체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의 창립이다. 이 교수조직은 '87년 6월 민중항쟁의 기운 속에서 그 해 7월 21일 전국 42개 대학 664명의 교수가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그리고 결성 2년여를 맞은 1989년 6월에는 참여 대학과 교수의 수가 크게 늘어나 전국의 71개 대학에서 1,555명의 교수가 회원으로 되어 있다. 이 전국 단위의 교수협의회는 學園民主化와 教育民主化는 社會民主化를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창립 이후 일관되게 대학민주화와 사회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 왔다. 이 교수협의회에서는 특히 반민주 악법 철폐 운동과 민중생존권 운동 그리고 민족통일운동을 현 단계의 실천 방향으로 보고 사회의 여러 민주 단체들과 연계하거나 또는 전국 국립 및 사립대학교 교수협의회 등과 연대하여 '80년대 후반기의 민족민주운동에 한 몫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 5.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 현대사에서의 대학 교수의 의식 구조 및 그 시대적 상황을 몇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물론 머리말에서 언급했던 대로 이 글에서는 각 시기의 대학 교수의 의식구조를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라는 일반적이고 본연의 교수의 임무와 관련지워 검토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교수의 학문 연수와 교육 부문을 덜 중요하게 여겨서 그러한 것은 물론 아니다. 아니 오히려 대학 교수의 현실 인식과 그 참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영역의 학술 연구의 충실함과 학생에게의 진리 연수가 성실하게 행해짐을 전제로 할 때에만 그 시대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하겠다.

앞에서 각 시대별 대학 교수의 현실 인식과 사회 참여를 통한 역사적 과제의 실천 모습들을 살펴 보면서, 현 시점에서의 대학 교수의 의식을 바탕으로 모든 활동은 현 단계 한국 사회의 변혁 운동에 통합되는 한 몫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역할을 다 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학원자유화와 교육민주화의 과업은 自主·民主·統一이라는 시대적 지향을 담은 현실 변혁운동의 형태로 유기적으로 연계·통합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앞으로 우리 교수들은 자기 자기 전공 분야의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현실 문제들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학문과 교육 그리고 대학에 관련되는 문제와 우리 사회의 민족민주운동과를 맥락지워서 사회 변혁의 방향을 모색하고 실천해 나가는 가운데 그 지평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